

# WEEKLY CLIMATE REPORT

탄소중립&기후변화 국제동향



## 7.10~7.23. 주요 동향

- 01 (미국) 맨친과 기후패키지 합의 및 바이든의 기후변화 행정명령 (7.20.)
- 02 (EU) 집행위의 가스 절약 15% 계획안 합의 (7.12.)
- 03 (독일) 기후변화 비상계획 수립 (7.13)
- 04 (영국) 보수당 총리 후보들의 기후변화 정책 노선 (7.20.)
- 05 (세계) 미·중 등 다배출국가, 전 세계에 3조 달러 피해 (7.12)
- 06 (호주) 기후법 상정 및 COP29 개최 계획 발표 (7.12.)
- 07 (독일) 독일, 피터스버그 기후대화 폐막 및 ‘글로벌 실드’ 구축 제안 (7.18.)

## 01

**(미국) 맨친과 기후패키지 합의 및 바이든의 기후변화 행정명령<sup>1)2)3)</sup> (7.20.)**

- 조 맨친 상원의원 다시 한번 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6월에 발표된 물가상승 지수가 9.1%를 기록함에 따라, 기후패키지 법안 통과가 추가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나(7.13.), 7월 27일 기존 예산에서 축소된 버전의 기후패키지에 합의 도달
  - 민주당은 공화당의 필리버스터를 피하고 당내 과반의석을 통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예산조정절차(Budget Reconciliation)를 통해 다음 주 합의안 처리 계획
  - 맨친의원원과 척 슈머 원내대표는 공동성명에서 향후 10년 동안 재생·청정에너지 중심 기후프로그램에 3,690억 달러 투자로 '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40% 감축이 가능할 것이라 발표
  - 본 예산안 합의는 기존 예산 대비 축소된 버전이나 11월에 예정된 중간선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향후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대응 정책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
- 바이든 대통령은 맨친의원의 기존 기후패키지 반대 발표 이후, 기후변화를 비상사태로 규정하며 기후변화 목표 달성을 위해 ①'22년 23억 달러 규모의 건물 복원 인프라 및 커뮤니티 프로그램, ②저소득 가정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 ③해상풍력 사업 및 관련 일자리 확대 계획 등을 포함한 행정명령을 발표(7.20.)
  - 백악관은 수주 내 일련의 기후 대응 행정명령을 발표할 계획이며 기후 비상사태 선언에 대해 검토 후 비상사태 선언 가능성 여전히 존재

## 02

**(EU) 집행위의 가스 절약 15% 계획안 합의<sup>4)5)</sup> (7.12.)**

-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량 추가 감축으로 에너지 부족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EU 집행위는 천연가스 수요감축 조치에 관한 규정\*을 발표, '22년 8월부터 '23년 3월까지 지난 5년 동안 같은 기간 평균 소비량 대비 15% 가스 수요감축에 합의
  - \* Council Regulation on Coordinated Demand Reduction Measures for Gas
  - 본 합의안은 여러 회원국의 반대로 자발적 감축안으로 합의되었으며, 대다수 회원국의 동의를 필요한 이사회의 '연합 경보(Union Alert)'가 있을 시에만 의무화 부여

1) CNBC, Biden says he will act on climate change after Manchin opposes legislation (7.15)

2) Whitehouse, Fact Sheet: President Biden's Executive Actions on Climate to Address Extreme Heat and Boost Offshore Wind (7.20)

3) The Hill, Manchin, Schumer announce slimmed-down deal on climate, taxes, health (7.27)

4) Guardian, Risk of 'conflict and strife' in Europe over energy crisis, EU deputy warns(7.8)

5) EU Commission, Save Gas for a Safe Winter: Commission proposes gas demand reduction plan to prepare EU for supply cuts (7.20)

- 수요감축 계획에는 대체 연료 사용 방안과 분야별 에너지 절약 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가정과 병원 등 에너지 필수 사용 분야에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방안 등 회원국의 감축 계획 작성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공
- 다른 회원국의 가스망에 연결되지 않은 국가와 EU 전기 시스템과 동기화되지 않고 전기 생산 시 가스 의존도가 높은 국가, 가스 수출국 및 저장 보유고가 높은 국가는 감축에서 면제 또는 수요감축 축소 대상
- 가스 수요 감축의 첫 번째 목표는 회원국의 재생에너지와 청정에너지 사용 전환을 촉진하는 것으로 감축 의무가 없는 대체 연료의 사용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권장
  - 석탄, 석유 및 원자력 발전 사용은 일시적인 방안으로 탄소 배출을 확대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용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EU는 REPowerEU 계획\*을 발표하고, 에너지 공동 조달을 위한 유럽연합 에너지 플랫폼(EU Energy Platform)\*을 구축하는 한편 비 러시아산 LNG 공급량을 늘리고 공급망을 확보하는 등 EU 회원국의 에너지 안정성 확보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 '30년까지 러시아산 화석연료로부터 독립하겠다는 집행위의 계획
  - \* EU회원국들의 자발적 가스·수소 공동조달 플랫폼으로 REPowerEU 계획의 일환으로 '22년 4월 출범

## 03 (독일) 기후변화 비상계획 수립<sup>6)7)</sup> (7.13.)

- 독일은 기후법에 의해 환경청의 배출량 발표 이후 전년도 감축 목표 미달성 분야는 90일 이내 비상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
  - 독일의 '21년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가스 가격 상승 및 재생에너지 생산량 감소로 석탄발전 가동률이 늘며 전년 대비 4.5% 증가
  - (건물 분야) '21년 배출량 목표 113MtCO<sub>2</sub>e를 초과한 115MtCO<sub>2</sub>e를 배출해 △신규 가스보일러 '24년부터 사용 금지 및 신규 보일러 재생에너지 65% 이상 사용 의무화, △'24년까지 '21년 대비 히트펌프 설치 3배 확대, △에너지효율지침 개정 등 계획
  - (운송 분야) '21년 배출량 목표는 145MtCO<sub>2</sub>e이었으나 148MtCO<sub>2</sub>e을 배출해,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대 및 에너지 효율적인 상용중장비차 혁신을 위해 자금 지원 확대, △자전거 도로 확충을 위해 '30년까지 2.5억 유로 투자 및 디지털화를 통한 재택근무 확대 계획

6) Reuters, Germany sets climate emergency plan in transport, construction sectors(7.13)

7) Euractiv, Berlin unveils emergency plan to meet building sector's climate goals(7.13)

## 04

**(영국) 보수당 총리 후보들의 기후변화 정책 노선<sup>8)9)</sup>(7.20.)**

- 영국 환경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기후변화 정책 소송에서 영국 고등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정부에 '23년 3월 말까지 기후법에 따른 넷제로 전략 업데이트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명령
- 이에 따라, 차기 총리 후보들의 넷제로 정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최종 총리 후보 2인인 전 재무장관 리시 수낙(Rishi Sunak)과 외무장관 리즈 트러스(Liz Truss)는 친기후 정책 추진 경력이 부족하다는 평가
  - 두 후보는 기본적으로 '50년 넷제로 정책은 지지하나 존슨 총리와 달리 기후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으며 ‘넷제로 정밀조사 그룹(Net Zero Scrunity Group)’과 같은 당내 기후 회의론자들에 의해 기후 정책 완화 또는 폐기 압박을 받을 것
- 40.3도가 넘는 역사적인 폭염을 경험하고 있는 영국에서 유권자의 70%가 기후변화를 폭염의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기후변화 정책이 9월에 있을 보수당 전체 당원 투표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05

**(세계) 미·중 등 탄소 다배출국가, 전 세계에 3조 달러 피해<sup>10)</sup> (7.12.)**

- 영국 다투머스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온실가스 최다 배출국인 중국과 미국이 세계 경제에 총 3조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혔고, 인도, 러시아, 브라질을 포함한 5개국은 '90년부터 '14년까지 세계 GDP에 약 6조 달러에 달하는 피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남
  - 중국과 미국은 같은 기간 전 세계 GDP에 미친 피해가 1.8조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
  - 주요 배출국들의 역사적인 배출량에 따른 각국의 GDP 변화를 계량화한 본 연구에서 방글라데시의 경우 미국과 중국이 각 141억 달러와 136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입힌 것으로 산출됨
- 한 나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다른 나라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어 경제성장을 저해했다는 연구 결과 발표는 앞으로 이어질 많은 기후변화 관련 책임 공방에서 과학적 근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이는 단일 국가의 노력으로는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

8) Guardian, Court orders UK government to explain how net zero policies will reach targets(7.18)

9) Climate Change News, In Rishi Sunak and Liz Truss, UK's two PM contenders have poor climate records(7.20)

10) The Hill, US emissions inflict almost \$2T in damage to other countries: study (7.12)

결과로 국제 사회가 기후변화 극복을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

## 06

### (호주) 기후법 상정 및 COP29 개최 계획 발표<sup>11)12)</sup> (7.12.)

- 호주 새 총리 앤서니 알바니지는 지난 7월 12일부터 13일 양일간 개최된 시드니 에너지 포럼에서, 기후변화 및 에너지 혁신의 ‘새로운 시대’를 발표
  - 정권 교체 이후 첫 의회 회기에서 '30년 탄소 배출 43% 감축 및 '50년 넷제로 목표를 상정해 법제화할 계획
  - 노동당이 과반인 하원 통과 이후 상원에서 기후 목표 상향에 전면 반대하는 자유민주연합과 '30년까지 60% 감축으로 목표 상향을 원하는 녹색당 및 무소속 의원들에 의해 기후법안 법제화 불가능 가능성도 존재
  - 국제개발·태평양부 장관 팻 콘로이(Pat Conroy)는 정부가 제시한 목표는 최대치가 아닌 최소치라는 것을 강조하며 향후 목표 상향 조정의 가능성을 언급
- 현재 호주의 감축 목표는 선진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나 가장 큰 수출 산업인 광산 부문의 반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 현 정부의 입장
  - 실제로 알바니지 총리는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이유로 신규 석탄 채굴 중단 및 수출 금지 선언을 하지 않을 것임을 공표
- 한편, 호주는 시드니 에너지 포럼에 이어 열린 태평양 제도 포럼(Pacific Islands Forum)에서, 태평양 도서국가와 함께 '24년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공동 주최 추진 계획을 발표

## 07

### (독일) 피터스버그 기후대화 폐막 및 ‘글로벌 실드’ 구축 제안<sup>13)14)</sup> (7.18.)

-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준비를 위한 비공식 연례회의인 제13차 피터스버그 기후대화에서 각국 대표는 배출 감축 목표 및 기후변화 적응 등에 관한 논의뿐만 아니라 기후 위기에 따른 재정적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논의
  - 독일 외교부 장관 아날레나 베어보크는 기후변화는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며, 최근 러시아의 가스 수출 중단으로 석탄발전량을 늘렸으나, 이는 일시적인 비상조치로서 장기적인 기후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하고 다자간 기후 협상에서 신뢰를 다짐
  - 이집트 외교장관이자 COP27의장인 사메 쇼크리는 피터스버그 기후대화를 통해

11) Bloomberg, Australian Prime Minister Pledges ‘New Era’ of Climate Action Under Labor (7.11)

12) The Sydney Morning Herald, Australia campaigns to co-host target-setting UN climate summit with the Pacific (7.12)

13) Deutsche Welle, Petersberg Climate Dialogue: Germany rejects delaying climate action (7.19)

14) Climate Home News, Germany promotes insurance-based ‘global shield’ for climate victims (7.18)

COP27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을 확인했다고 발언하며, 감축 및 적응 분야뿐만 아니라 ‘손실과 피해’ 대응에 관한 논의가 필요함을 재차 강조

- (글로벌 실드) 독일 외무부는 기후위기에 따른 피해에 대한 재정 지원 및 관련 보험 등을 포함한 ‘글로벌 실드(Global Shield)’ 제도를 제안
  - 전문가들은 해당 이니셔티브는 기후 취약국가의 국민들에게 보험료를 지불하게 함으로써 기후위기에 따른 피해보상을 피하기 위한 선진국의 의도가 담긴 제안이라 비판
  - 또한, 폭풍, 가뭄, 산불과 같은 갑작스러운 재난은 보상 가능하지만, 사막화와 해수면 상승과 같은 느리게 진행되는 재난은 보상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
  - 독일은 현재 V20\* 그룹과 함께 ‘글로벌 실드’ 도입 논의를 진행 중이며 G7은 해당 제도를 지원에 합의, 관련 세부 사항은 COP27에서 발표될 예정

\* The Vulnerable Twenty(V20): 기후변화에 취약한 55개국이 회원국으로 구성된 이니셔티브로 회원국은 전 세계 GDP의 2.4조 달러를 차지하고 14억 인구를 대표하지만, 전체 온실가스의 5%만을 배출